

한국경제 생산성 혁명 필요하다

이 두 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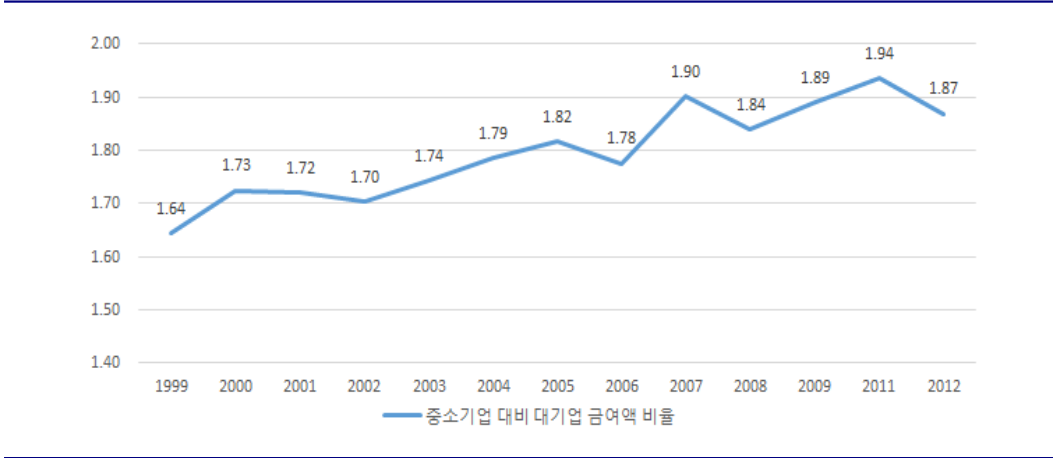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저물가의 악순환 속에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구조가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와 같이 장기적인 경기둔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최경환 부총리 등 경제팀은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등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분히 구조적인 요인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면이 많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러하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공기업 개혁의 문제,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경쟁력 낙후, 경직적 노동시장과 높은 노동비용의 문제 등은 단순히 정부의 육성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들이다.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생산성 격차 또는 생산성 낙후가 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그리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격차는 생산성 격차로 인해 야기된 현상이며, 노동비용의 증가 역시 단순히 임금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을 감안한 단위노동비용의 증가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경제의 더 큰 문제점은 이와 같은 생산성 격차 및 낙후의 문제가 최근 수 년 간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각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악화되고야 말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자. 중소기업은 2013년 현재 전체 기업 숫자의 99% 고용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및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절반에 가깝다. 이와 같은 수치들만 놓고 보면 중소기업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으며, 한국을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라고 부르지

도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의 표면적인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의 임금수준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약 2배에 달한다. 특히 이러한 임금격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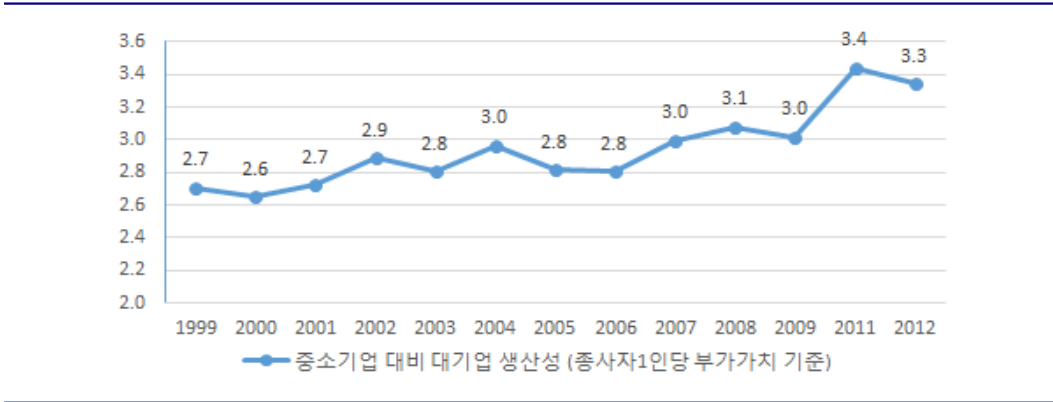
<그림 1>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급여액 비율(제조업)



출처: 통계청 KOSIS, 광업제조업조사, 시도/산업분류/종사자규모별 주요지표.

하지만 임금격차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의 3배가 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생산성 격차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큰 차이로 생산성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림 2>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노동생산성(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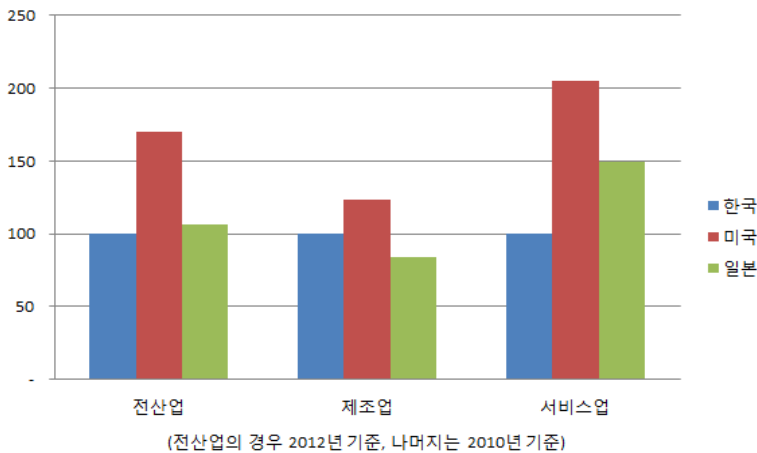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KOSIS, 광업제조업조사, 시도/산업분류/종사자규모별 주요지표.

사실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최근 들어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일본이나 대만 등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런 점들일 것이다. 일본이나 대만 등과 같은 중소기업 강국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한국에 비하여 크지 않으며, 더욱이 그 격차가 시간을 두고 더욱 벌어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서비스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준 ppp로 측정한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의 경우 한국의 제조업은 \$111,475로서 전체 조사대상인 OECD 25개국 중 2위를 기록하였으나, 서비스업은 24개국 중 2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미국과 일본에 비교할 경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에서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하여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알려진 일본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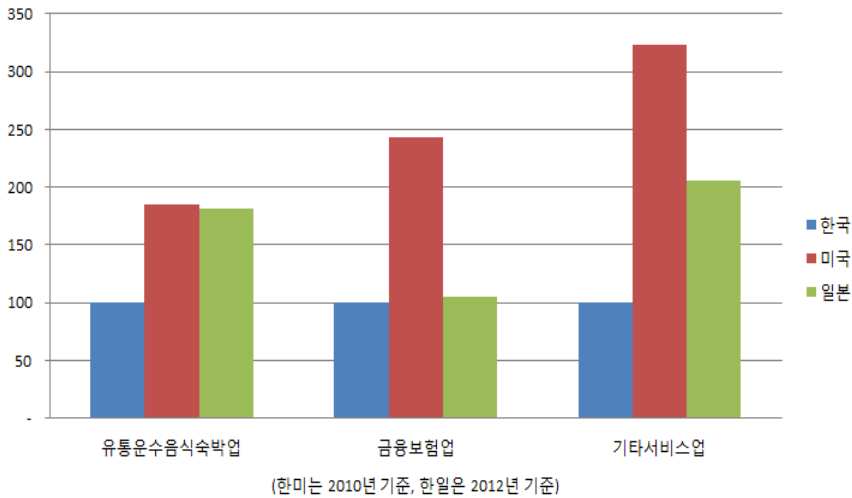
<그림 3> 한미일 노동생산성 지수 비교(한국=100, ppp기준)



출처: 한국생산성본부(2012, 2014).

특히 많은 취업자가 몰려 있는 유통·운수·음식·숙박업과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는 기타 서비스업(스포츠/예술/여가,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은 조사대상 2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4>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이 분야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노동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 한미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교(한국=100, ppp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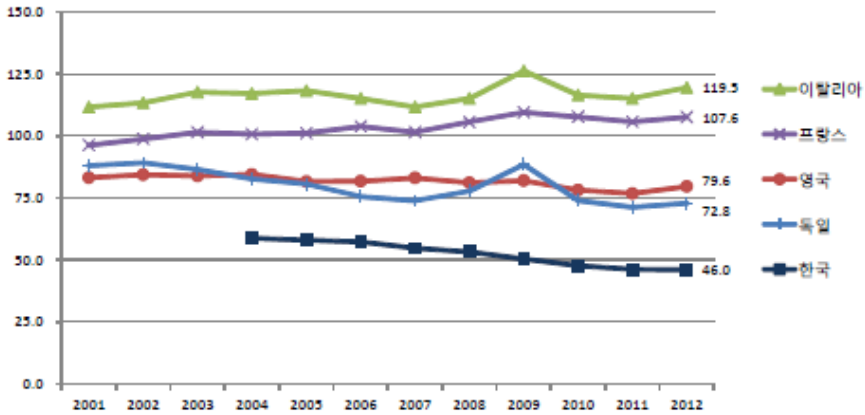


출처: 한국생산성본부(2012, 2014).

물론 유통·운수·음식·숙박업과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고용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는 상대적으로 무관한 금융·보험업 역시 전체 조사대상국 23개국들 중에서 20위에 머물고 있으며, 정보통신업의 경우 25개국 중 24위로서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문제가 단순히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역시 이와 같이 낙후된 노동생산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사이의 격차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의 경우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약59%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46%로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태리,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은 두 산업의 생산성 격차가 지난 10여 년 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비록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 서비스업과 제조업 생산성의 격차가 동기간 동안에 벌어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한국에 비해서 완만한 편이다. 지난 10여 년 간 이와 같은 생산성 격차로 인하여, 한국은 2012년 현재 조사대상 25개국들 중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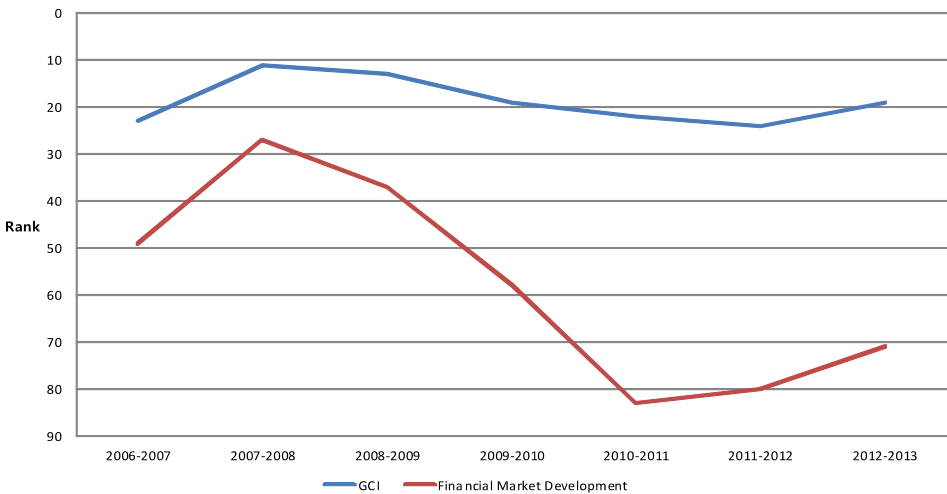
<그림 5>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수준 비교



출처: 한국생산성본부(2014)의 그림5-2를 재인용함.

아마도 생산성 저하에 의한 국제경쟁력 낙후의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산업이 금융업이 될 것이다. <그림 6>은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을 보여주는 GCI(global competitiveness index)의 세계 순위와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순위인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지수의 세계 순위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6> 한국 전산업과 금융업의 경쟁력 순위



출처: World Economic Forum(각 년도).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은 지난 수 년 간 세계 약 20위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금융산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급기야 2013년도에는 세계 약 81위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우간다 또는 네팔과 비슷한 순위이다. 이와 같이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가지고는 한국경제는 도저히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생산성 증가 없이 무조건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Rodrik(2014)는 최근 발표에서, 개도국들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고용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구조변화가 아니라 逆의 구조변화(perverse structural change)라고 경계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도 2004년에 비해 2012년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64.7%에서 69.3%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 역시 낮은 노동생산성과 관계가 있다. 특히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을 지닌 국가라는 오명도 결국은 노동의 생산성 특히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낮으므로, 선진국 노동자들이 8시간에 걸쳐 할 일을 한국 노동자들은 10시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노동시장은 통상임금 및 정년연장 등의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가까운 미래에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된다. 비록 단위노동비용이 최근 수 년 간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노동비용의 상승이 본격화된다면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역시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산성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제까지 정부의 주요 대책은 중소기업, 서비스업,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구조조정 역시 필요하다. 일본경제 역시 1990년대 초반에 각종 부실기업 및 부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현재와 같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베노믹스 역시 그 세 번째 화살인 구조조정이 미진한 상태이다. 아베노믹스의 조연자인 예일대학의 하마다 고이치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일본정부의 통화정책은 A, 재정정책은 B, 그리고 구조조정은 E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는 필연적으로 정리해고 및 실업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은 현 정부의 정책목표인 고용률 제고와 단기적으로 상충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과 재정지출은 바로 이러한 구조조정의 고통을 경감하고, 새 살을 돋게 하는 곳에 쓰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으로 폐업하는 서비스업 및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교육 및 훈련 등에 정부지출이 쓰여야 한다. 김용성(2013)의 분석에서도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보다는 고용서비스 개선 및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가 장기적으로 고용률

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가입자 숫자를 늘려서 구조조정의 고통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복지시스템을 개편하여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체계를 갖추면서 동시에 구조조정을 실시해야만 생산성 향상과 고용률 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용성 (2013),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3-19.

한국생산성본부 (2012, 2014),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한국통계정보원, <http://kosis.or.kr>.

Rodrik, Dani (2014. 8), “Rethinking Growth Strategy in East Asia,”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2-2013 (<http://www.weforum.org/issues/competitiveness-0/gci2012-data-platform/>).